

음란물범죄 솜방망이 처벌...또 다른 'n번방의 악몽' 부른다

소라넷 시초로 우후죽순 생겨나...알바 미끼 유인 협박 촬영·유포 아동·청소년까지 성착취 피해...가상화폐 거래로 경찰 추적 피해 광주·전남 범죄 3년간 354건에 구속은 18명 뿐...처벌 강화 절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음란물 관련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행태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여성계 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제 2, 3의 n번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피해, 어떻게 가능했나? 성 착취물을 SNS상에서 공유하는 방식인 일명 'n번방'의 시초는 '소라넷'이다.

지난 1999년 개설된 소라넷은 몰카·보복성 불법 촬영물·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음란물을 공유하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회원 수만 100만여명)로 지난 2016년 6월6일 폐쇄됐다.

이후 '에이브리스톱'(AVSNOOP), '꿀밤' 등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음란물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되면서 SNS로 불법 음란 사이트들이 이동해 갔다.

이 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여러 대화방이 개설됐고 방마다 1번방, 2번방 등 고유의 숫자가 붙여졌다. 이른바 n번방이다.

이번에 구속된 이른바 '박사' 조주빈(25)은 텔레그램에 n번방과 같은 일명 '박

사방'을 만들고, 유료 회원을 기반으로 등급을 나눠 음란물을 공개했다. 유료 대화방은 영상 수위에 따라 1~3단계로 나누고 입장료는 1단계 방 20만원, 2단계 방 70만원, 3단계 방 150만원으로 책정했다. 거래는 모두 가상화폐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조씨는 트위터나 채팅 앱을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했다. 피해 여성들에게 돈을 받을 계좌번호와 핸드폰 등의 선물을 보내준다며 주소를 받아내면서 개인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처음에는 간단한 몸사진부터 요구하고 점차 수위를 높였다. 처음 돈을 받을 수 있어 조씨 요구에 응했다가 엽기적인 요구에 거부한 여성들에게는 신상정보를 쥐고 그동안 보낸 사진들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현재까지 70명이 넘고 미성년자도 16명에 이른다. 이렇게 작위해 만든 불법 영상을 돈을 주고 본 회원

들이 수만명에 이른다.

◇'솜방망이' 처벌 수위는 한계=처벌 수위가 약해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음란물 관련 범죄는 지난 2017년 43건을 비롯해 2018년 78건, 2019년 82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도 2017년 19건, 2018년 20건, 2019년 23건 등으로 증가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음란물 관련 범죄 적발 건수가 2017년 38건, 2018년 59건, 2019년 54건 등 증가세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단속 건수가 203건임에도 구속인원은 7명(3%)에 불과했다. 전남도 151건의 관련 범죄를 처리했지만 고작 11명(7%)만 구속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는 법과 제도,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과정에서는 구속은 커녕 불구속 수사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도 징역형(1년 이하)이 가능하지만 형량 자체가 낮아 처벌의 경우 범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 수준에 머문다.

법무부는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빛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는 이같은 점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범죄와 영상물 촬영 같은 범죄를 끊이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또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 김효경 활동가는 "광주·전남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디지털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에게 대한 지원단체가 없어 피해자들이 혼자 대처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구체적 수사 계획·지침을 받는대로 n번방 영상 소지자·유포 방조자 등 가담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거리서 신체 주요부위 노출 "음란행위 확산 어렵다" 무죄

거리와 공원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신체 부위를 꺼내놓는 행위를 했더라도,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역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있는데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공역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 2명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정점은 A씨 행위가 형법(245조3) 공역음란죄가 규정한 '음란한 행위'인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코로나 극복 '나눔 도시락'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황솔촌 상무점에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의 취약가정에 전달할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최혜배 기자 choi@

화물차, 캠핑카로 개조... "자동차 튜닝 해당 안돼" 판결

승인을 받지 않고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했다라도,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캠핑차 제작업체에서 승인받지 않고 자신의 포터II 화물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인 이른바 '캠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차량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속물을 추가하는'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설치한 캠퍼는 언제든지 화물차에서 쉽게 분리·합체가 가능하고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캠퍼는 4개의 안전 고리로 화물차에 고정되는데 캠퍼를 분리하는 데 2분, 합체할 때 3분, 화물차와 캠퍼를 안전 고리로 연결하는 데도 5분 이내면 가능하다. 캠퍼를

화물차에 올리더라도 화물차 자체의 구조·장치 등이 변경되거나 변형되지 않아 캠퍼를 결합하면서 화물차 적재함 부분의 구조·장치 등의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도 "캠핑을 갈 때에만 화물차에 합체했다"고 주장, 오랫동안 분리하지 않고 일체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화물차에 캠퍼를 얹어 고정시켜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문화계 블랙리스트' 소송 3년째 관심

예술인 26명 참여 손배소 두번째 변론기일 진행

광주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지역 예술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3년째 진행되면서 진행 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지역 문화예술인 26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애초 원고 39명이 참여했으나 실질적인 피해 입증 등을 감안,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원고들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상징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잡고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의 행위가 추가로 드러

나면 재산정하기로 했다.

원고들은 문학·연극·영화·미술·음악·전통예술 분야 종사자들로, 대부분 2014년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했거나 지역 예술인협회 집행부로 활동한 이력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시국 선언자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규정하고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지난 2017년 2월 제기됐지만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6600쪽 분량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려 다음 재판에 신청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음주운전 사고 내고 뺑소니...때마침 지나던 경찰차 추격 검거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났다가 그때마침 지나던 경찰차의 추격으로 검거.

○...24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23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에쿠스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 B씨의 K3 차량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를 밀치고 500m가량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외에 도 B씨 등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